

육아정책 소식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5월 15일(화)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18일(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수당 신청 대상 〉

- 연령: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위한 교육부-KB금융그룹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5월 14일(월)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 발전을 위해, KB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을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5년 간 국·공립 유치원(병설 기준)을 최대 250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돌봄교실 약 1,700여 실에 대한 혁신적 리모델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KB금융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 ①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KB금융그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750억 원(매년 150억 원)을 지원한다.
- ③ KB금융그룹은 국·공립 유치원 취약 지역에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여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초등 돌봄교실 확충을 위해 일반교실의 혁신적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상희)는 6월 5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육·돌봄 친화적 문화조성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하나금융그룹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양육과 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기부채납을 통해 비수도권, 신혼부부 밀집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번 위원회와 복지부,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은 보육인프라 및 사회인식개선 등 전방위적인 민관협력을 포함하는 첫 사례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난제를 총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일·생활 균형과 양육·돌봄 친화적인 사회 문화조성은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저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재정 형편 때문에 주저하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어느 때보다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금번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자원봉사자로 퇴직교직원 연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18일(수) 퇴직교원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간인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퇴직교직원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간 내 아동 안전 관리, 등하교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사회공헌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설립되어 현재 56개 봉사단에서 총 2,000여 명의 퇴직교직원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퇴직교직원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해 인생의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부모와 아이들은 지역사회 돌봄공간을 더욱 신뢰하며 활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9일(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보육사업안내 개정안(p. 321) 〉

-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mu\text{g}/\text{m}^3$, PM2.5 36 $\mu\text{g}/\text{m}^3$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 발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월 6일(금) 임신·출산부터 교육·자립·취업까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를 새롭게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일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용 가능한 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판보다 지원분야를 더욱 일목요연하게 세분화하고, 2년 새 변화된 사항(지원내용, 소득기준, 기관명, 연락처 등)을 반영했다. 이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는 ▲임신·

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서비스들이 총망라됐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양육·생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정책 안내책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관련기관에 배포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 형태가 어떻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